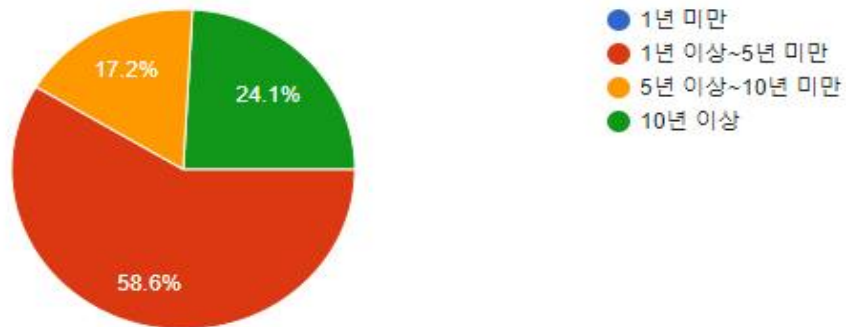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1주년 설문 응답 (~2023. 10. 20.)

응답자 총 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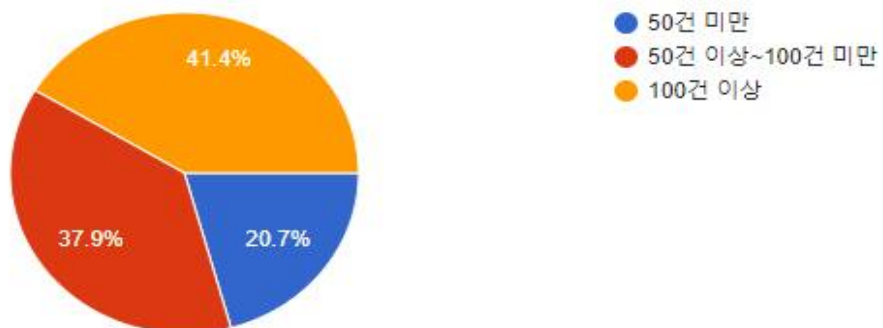
1-1. 귀하의 피해자국선번호사 업무의 연차는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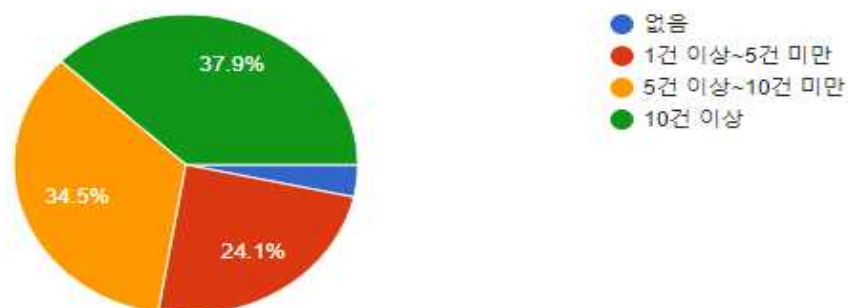
1-2. 1년 기준으로 대략적인 담당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29개



2. 2022. 12. 9.자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 후, 형사 공탁이 이루어진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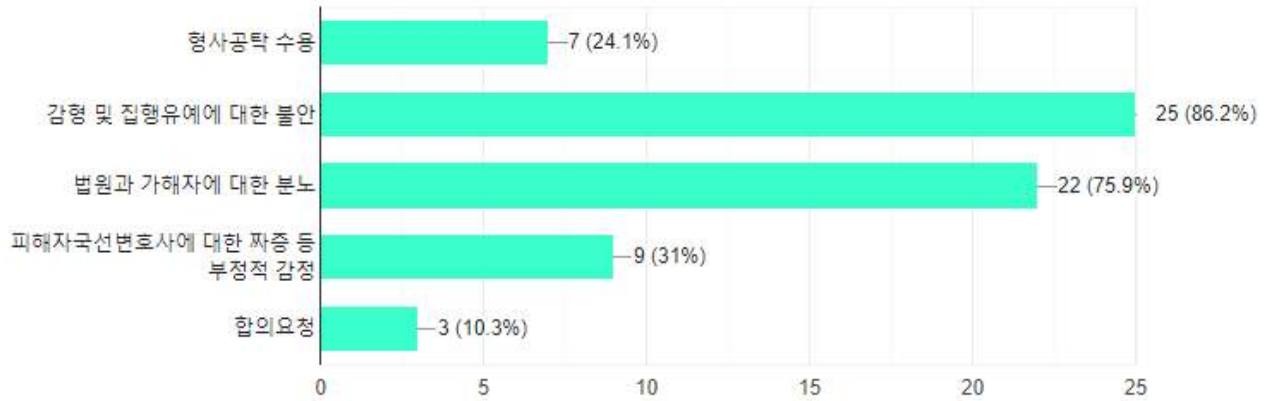
응답 29개



3. 형사공탁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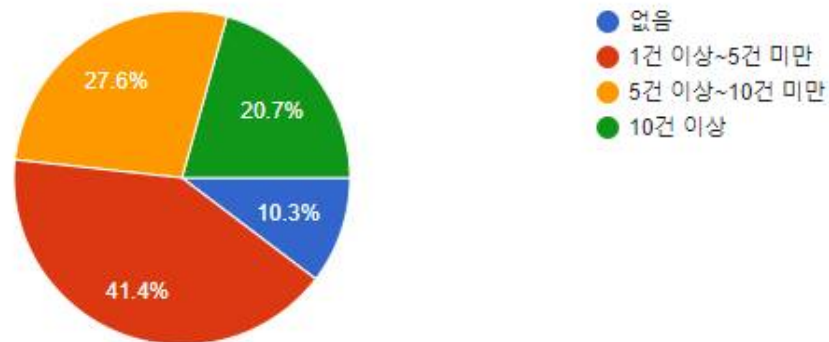
 복사

응답 29개



4-1.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따른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사실통지서를 받은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29개



4-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공탁사실통지서는 어떻게 수령하셨습니다? (수령자가 '기타'인 경우 체크 후, 수령자를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사

응답 29개



4-3. 귀하가 형사공탁사실에 대한 피해자(미성년자, 장애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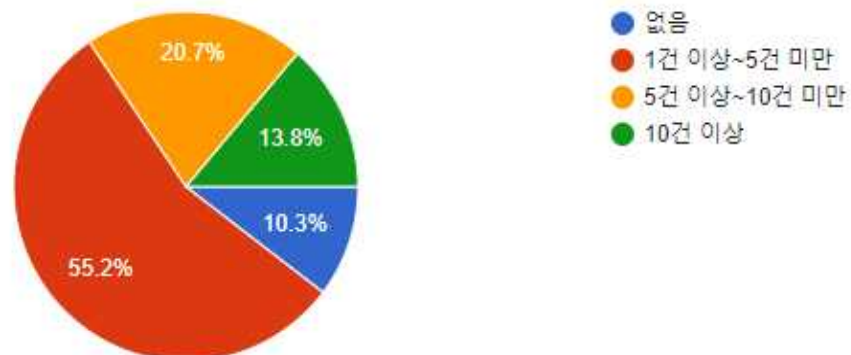
복사

응답 29개



5. 피해자가 공탁 불수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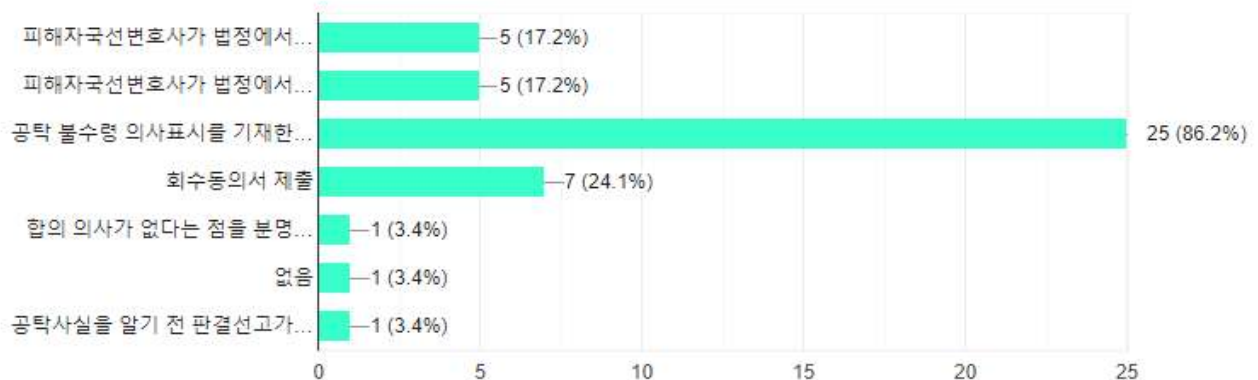
응답 29개



6. 피해자의 공탁 불수령 의사표시는 법원에 어떻게 전달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사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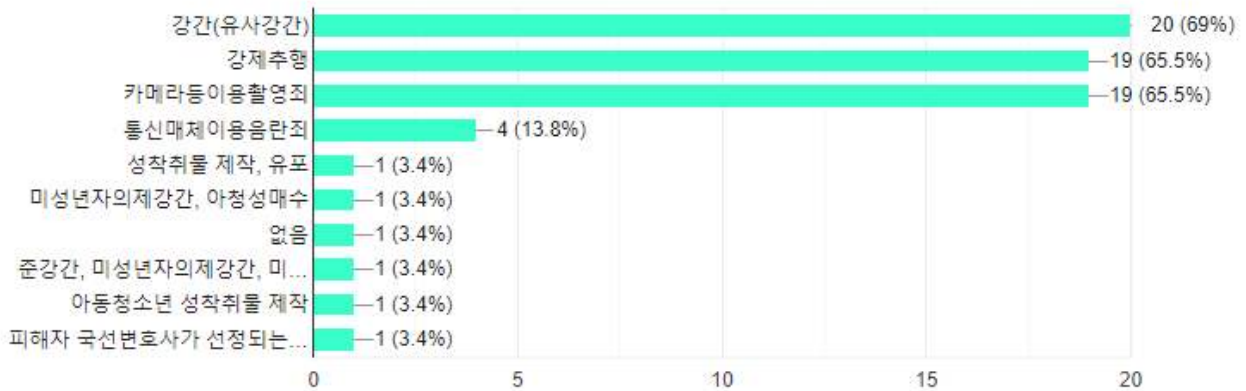


- ※ 피해자국선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재판장이 조서에 남기지는 않음: 5(17.2%)
- ※ 피해자국선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재판장이 명하여 조서에 남김: 5(17.2%)
- ※ 공탁 불수령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의 의견서 제출: 25(86.2%)
- ※ 회수동의서 제출: 7(24.1%)
- ※ 기타: 없음(1),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일방적인 공탁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1), 공탁 사실을 알기 전 판결선고가 되어 의사표시를 할 기회가 없었음(1)

7. 형사공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죄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사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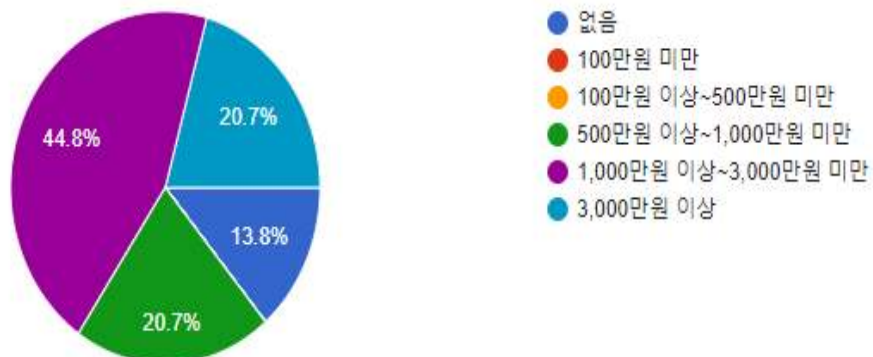


문항 8-1부터 8-5는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의 공탁금액에 대한 설문입니다.
(처리 사건 중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이 없는 경우 '없음' 표시하여 주십시오.)

8-1. 강간(유사강간)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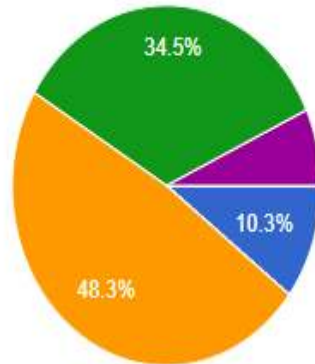
응답 29개



8-2. 강제추행

응답 29개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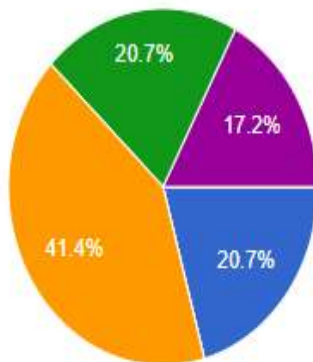


- 없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8-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응답 29개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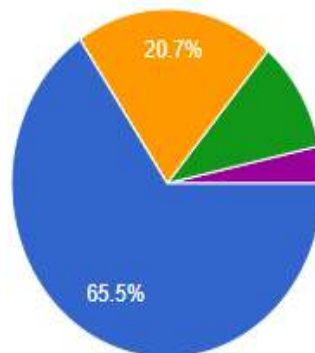


- 없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8-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응답 29개

 복사



- 없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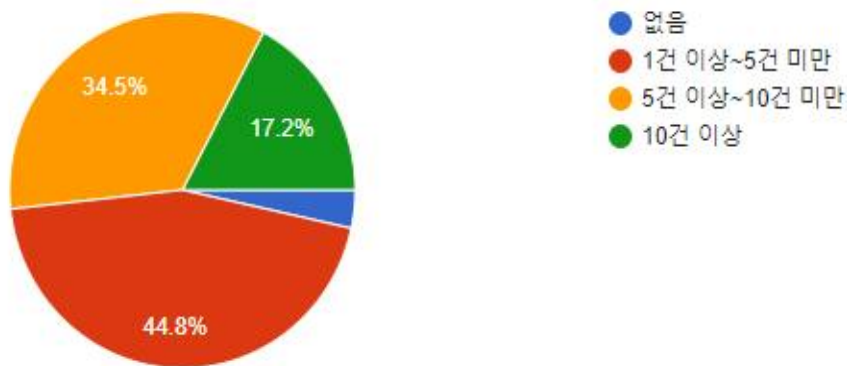
8-5. 기타 죄명과 공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택형 주관식, 없는 경우 생략하고 문항 9-1로 이동합니다.)

응답 3개

- 성착취물 제작, 소지 2~300개: 2천만 원(피해자 국선 사안은 아니나, 여가부 기금 통해 구조한 사건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2천
- 아청 성착취물제작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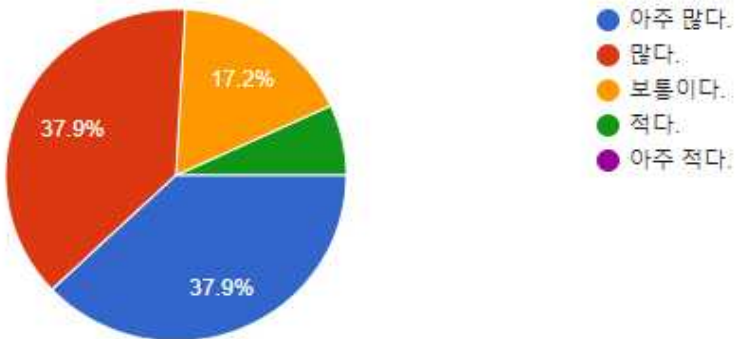
9-1.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공탁이 기재된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29개



9-2. 형사공탁이 전체적으로 양형(피고인의 감형, 집행유예)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고 보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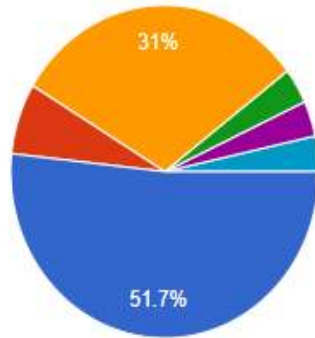
응답 29개



10-1.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사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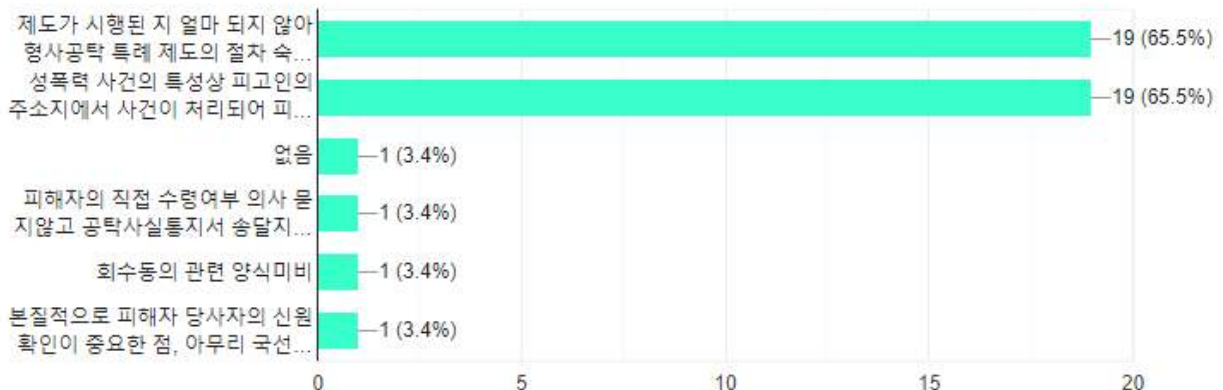
- 피해자(미성년, 장애인 포함)에게 전반적인 수령 절차 설명 후 피해자(친권자, 보호시설의 장 포함)가 처리하도록 안내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전반적인 수령 절차 설명 후 피해자가 처리하도록 안내...
- 전반적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은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하고, 이...
- 아직 수령을 원하는 케이스 경험이 없습니다.
- 없음
- 피해자 사실확인, 공탁계, 출급은행을...

- ※ 피해자(미성년, 장애인 포함)에게 전반적인 수령 절차 설명 후 피해자(친권자, 보호시설의 장 포함)가 처리하도록 안내(51.7%)
- ※ 전반적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은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하고, 이후 실제 수령 절차는 피해자(친권자, 보호시설의 장 포함)가 하도록 안내(31%)
-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전반적인 수령 절차 설명 후 피해자가 처리하도록 안내하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공탁물 수령 절차 전체를 대리함
- ※ 기타: 없음(1), 아직 수령을 원하는 케이스 경험이 없음(1), 피해자 사실 확인, 공탁계, 출급은행을 다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소장의 피해자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에 대해서만 간략히 안내하고, 이후 공탁의 부분은 법원의 민원실을 통하여 구체적 절차 및 방문 부서를 확인하라는 방법으로 안내.(1)

10-2. 공탁물을 수령하는데 있어 불편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사

응답 29개



- ※ 제도가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아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절차 미숙: 19(65.5%)
- ※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사건이 처리되어 피해자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움: 19(65.5%)
- ※ 기타: 없음(1), 피해자의 직접 수령여부 의사 묻지 않고 공탁사실통지서 송달지를 각 재판부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정함(1), 회수동의 관련 양식 미비(1), 본질적으로 피해자 당사자의 신원확인이 중요한 점, 아무리 국선변호사가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직접 국선변호사에게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므로, 차라리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가서 직접 처리하고, 공탁금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다는 점, 합의 과정에 관하여 특별히 유의미한 보수가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에 관여하였다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관여 자체를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1)

▪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의 개선방향, 시행 후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택형 주관식)**

- 피해자의 걱정, 분노가 매우 큼니다.
- 공탁 불수령 의사를 의견서로 밝혔음에도 피해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판결문에 기재된 경우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이 심각합니다. 공탁제도로 피국의 업무가 늘었음에도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비해 관련 업무 보수 지급이 안 되는 점, 관련 업무에 생각보다 시간 소요 많이 되는 점 (민원이 많은 지역은 각 대기시간도 상당 소요)
- 적어도 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방공탁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원하지 않아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이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측이 선고 전날 공탁을 하는 등 회수동의서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음. 이때 법원에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회수동의서 제출을 원한다고 의견을 개진해보아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감형사유로 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최소한 피해자의 회수동의서 제출 권리는 보장할 시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람.
- 기습공탁이 많이 일어납니다.
- 피해자들의 합의하지 않을 권리, 엄벌을 탄원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가해자 중심의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합의불원의사가 공탁에 의해 무시당하는 현실이 불만스러움/합의금 찾지도 않았는데 공탁사실만으로 감형하는 것은 부당함
- 일단, 피해자가 강력하게 합의를 원치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이 공탁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아무리 공탁거부의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도 공탁

이 감형요소로 작용되는 것을 막기가 힘든 재판부가 있어 피해자 변호사로서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차라리 피고인 측에서 미리 공탁을 하면 피해자 측에서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겠지만, 피고인이 일언반구 없다가 판결 선고 직전 기습공탁을 하여 피해자로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요새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형사공탁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통지가 바로 바로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통지가 없고, 피해자에게 통지도 없이 선고가 되고 그 이후 알게 되는 경우는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 장애인 미성년자(특히 피해자와 보호자 의견이 다른 경우)의 의사확인의 어려움과 회수동의 절차 미비/공탁에 대한 반영 기준이 없음
- 형사공탁 제도는 결국 공탁법상의 '특례'이므로,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거부하고, 이에 피고인이 납부한 형사 공탁금이 즉시 피고인에게 다시 공탁되어 형사공탁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피고인 입장에서 연락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회복을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명시적으로 공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묵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